

※ 엠바고. 행사 종료 이후 보도 가능(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)

참고

교육발전특구 Q&A

Q1. 교육발전특구란 어떤 정책인지?

-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, 교육청, 대학, 지역 기업,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임
-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, 대학 교육까지 연계·지원하고,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,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.
- ※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체들이 협업하여 교육발전을 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**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정책목표**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 “교육자유특구”에서 “**교육발전특구**”로 명칭 변경

Q2.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추진하는 기본 방향은?

-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및 인적 기반 구축임
 - 첫째, 지역에서 공교육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,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
 - 둘째,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공교육 경쟁력 제고
 - 셋째,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구성·추진하고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무성 확대
 - 넷째,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 합리화 추진

Q3. 교육발전특구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?

①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지역책임 교육·돌봄 시스템 구축

- 지자체-교육청 등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‘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’으로 특구를 운영하여 지역맞춤형 교육·돌봄 체계 구축
- 지자체와 함께 하는 거점형 돌봄센터, 학생지원 교통 서비스 구축 등 지역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교육·돌봄 인프라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학령인구 유출 억제

< 예시 : 지자체 지원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>

- G군은 지역 소멸의 해결책을 교육과 돌봄에서 찾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에 인접한 부지에 교육·돌봄 복합시설을 설치하여, 방과후 돌봄 및 교육, 스터디센터, 키즈카페 등 지역 내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
- G군에서 직접 학생 전용 무료 셔틀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, 학교와 지역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기관, 도서관 등을 연결하고, 스마트폰과 연결한 위치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

② 이전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역 교육·정주 여건 개선

- 지역협의체를 통해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관련 학교 운영 수요 파악 후 지역 내 학교를 지정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교육과정 제공 등 인재양성 기반 조성
- 산업체 및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교육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, 학교운영과 시설, 인력 지원 등에 있어 지방정부 차원 투자 확대

< 예시 : 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운영 지원 >

- 다수의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는 A시 B구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하여 A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녀가 특구 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해당 공공기관의 전문 분야에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

③ 지역 산업전략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추진

- 고교과정부터 지역대학까지 연계하여 지역 산업 특성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지역산업 전문인력으로 양성
- 지자체·지역대학·기업이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전략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인재와 지역기업 육성

< 예시 :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>

- C시는 지역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바이오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소재 E대학에 바이오 분야 특성화 학과를 신설하고, 지역 내 소재한 5~6개 고교에서 E대학과 관련 산업체인 F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바이오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
- E대학의 일자리사업단을 통해, C시, E대학, F기업 및 지역 산업단지 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산업 연계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양성사업 공동 추진

- 지역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 분야와 인재양성 기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차별화된 지역발전 가능

④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지역 우수인재의 지역대학 진학 확대

-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의 주요 학과* 지역인재 비율을 자율적으로 확대

* 첨단기술 관련 분야,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, 지자체 중점 지원 분야 등

- 지역주체 간 협의를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의 행·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

⑤ 일반자치-교육자치 협력으로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 성과 창출

- 교육발전특구는 광역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지역 발전 사업으로 이를 통한 공교육 혁신 및 정주 여건 개선효과 기대
- 앞으로, 유보통합, 돌봄체계 구축 등 지방정부 간 협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지자체-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·협력 거버넌스가 선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 가능

< 예시 : 일반자치-교육자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>

- A시-A교육청-대학-시민단체-평생교육단체-학부모·학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「A시 지역교육협력체」를 운영하여 지역 교육발전 정책 협의 및 의견수렴

Q4. 교육발전특구의 운영모델은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?

- ◆ 추진계획에는 유아부터 대학교육까지 특구 내 적용 가능한 교육정책과 특례를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지만,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특화 모델을 지역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신청할 수 있음
- 지자체와 교육청, 지역대학 등이 협력하여, 유·초·중등·대학교육 분야 중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집중적 육성이나 연계·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관심분야 중심으로 다양한 모델의 특구 운영계획 수립 가능

① 지역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모델 : 지역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유입

- (목표) 현재 추진 중인 늘봄학교와 함께 지자체-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·돌봄 활성화를 통해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
- (주요 내용) 아파트 공간 및 지역사회 공공시설을 활용한 거점형 돌봄센터, 지자체·지역사회 지원 방과후 과정 운영, 지역대학 연계 방과후 서비스 제공, 돌봄 관련 학교업무 통합관리 지원 등 추진

② 초·중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모델 : 사교육 없는 학력 향상 지원

- (목표) 학생·학부모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의 공교육 역량 강화
- (주요 내용) 지역별 특색있는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, 디지털기반 맞춤형 교육 우선 도입,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교원 유치 등 특구 내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제고

③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 모델 :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체제 구축

- (목표) 지역산업과 지역 고교-대학, 지자체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취창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선순환 체제 구축
- (주요 내용)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, 지역 연계 장학제도 운영, 상생형 대학 일자리 사업 등 지역 산업단지와 교육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내 중·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지역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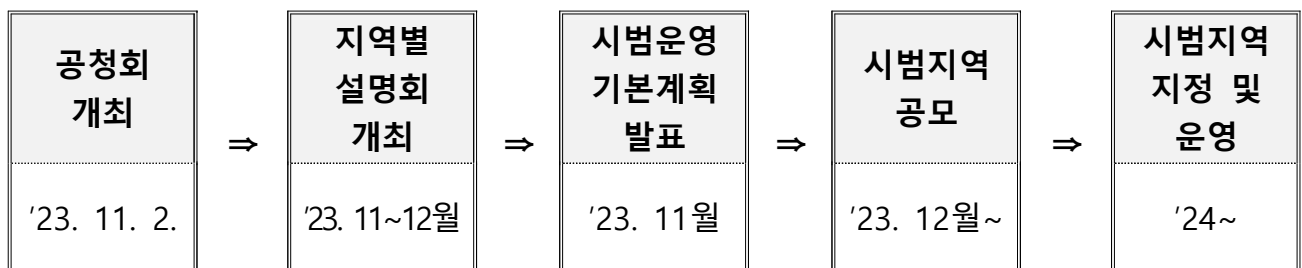
Q5.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

-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역의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음
 - 지방에서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특구 내 학교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
 - 또한, 지역대학 인기학과에 대한 지역인재 전형율 자율적으로 확대하고 학교·교육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하여 지역대학과 연계한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례 적용 가능
- 재정적 측면에서도 교육에 대한 지역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
 - 시범지역 운영단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투입하여 특구 당 30~100억원 내외 사업비 지원 검토
 - ※ 해당 지자체는 특별교부금 지원액 이상의 대응자금을 투입하고 중앙정부 지원액, 지자체 대응자금, 산업체 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을 지자체 조례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음
 - 광역/기초 등 특구 참여 범위, 지역교육 발전계획 내용, 지자체 대응 자금 및 가용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구별 사업비 지원규모 결정 예정

Q6. 교육발전특구 공청회 개최 이후 향후 시범사업 지정 일정은?

- ☐ 11월 중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, 2024년부터 시범운영을 위한 선정 평가 및 지정 절차 진행
 -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지역별 설명회 추진(' 23.11월~12월)
 - ※ 시안 발표 직후 전국 지자체를 방문하는 순회 설명회 개최 예정
 -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 계획 발표(' 23.11월)
 -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(' 23.12월~)
 -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및 운영(' 24.~)

< 교육발전특구 지정·운영 관련 주요 일정표 >



Q7. 교육발전특구 설치·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계획은?

- ☐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교육발전특구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담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,
- ☐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 시·도교육청 및 지자체,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별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